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9.6(금) ~ 2024.9.12(목)

제공일시 2024 09 2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9.6(금) ~ 2024.9.12(목)

제공일시 2024 09 2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미국, 재생에너지-태양광 목장 지원에 270억 투자

- 합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6대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함. 총 투자 규모는 2000만 달러(약 270억원)에 달함

- 미국 에너지부(DoE)는 10일(현지시간) 1160만 달러(약 155억원)를 투자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의 계획, 입지 선정, 허가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또, 820만 달러(약 110억원)의 상금이 걸린 영농형 태양광 공모전을 연다고 밝힘

[\(시타임스 2024.9.11\)](#)

2. 독일, 중국 기후 프로젝트의 그린워싱 우려... 탄소크레딧 22만톤 불인정

- 독일 연방환경청(UBA)은 6일(현지시각) 석유기업들이 중국의 기후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한 탄소크레딧 21만5000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바이오 연료 생산기업들이 1년 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그린워싱 문제를 지적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결과임

- 문제가 된 프로젝트들은 바이오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스트림 배출 감축(UER) 프로젝트라고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각) 전함

[\(임팩트온 2024.9.10\)](#)

3. '인권·민주주의 보호해야'... 미·영·EU, 세계 첫 'AI표준' 협정 체결

- 미국, 영국과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표준에 관한 협약을 세계 최초로 체결한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사안에 정통한 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함

- 이에 따르면, 이날 미국, 영국, EU는 지난 5월 유럽 인권 기구인 유럽평의회(CoE)가 채택한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에 관한 기본 협약'에 서명할 예정임

- 이 협약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AI를 사용할 때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AI와 관련한 국가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체결되는 건 이번이 처음임

[\(뉴스1 2024.9.5\)](#)

국내 정책

1.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된다

- 배터리 제조사 등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가 의무화됨.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21일까지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
- 예고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또,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표시해야 함.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조제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 포함됨

[\(파이낸셜뉴스 2024.9.9\)](#)

2.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중동서 기회 찾는다

- 환경부는 7~13일 카타르와 오만 현지에서 민관원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
-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은 재생에너지·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분야, 하수처리·해수담수화 등 수처리 분야의 국내 우수기업과 함께 카타르와 오만 정부 및 주요 발주처에 녹색기술 및 산업을 소개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환경부 외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산업협의회, 글로벌세아, 두산에너지빌리티,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등 민간이 공동으로 원팀을 구성해 중동 녹색산업 시장 개척에 나섬

[\(에너지신문 2024.9.8\)](#)

3. '국가 보조금' 명시한 반도체법 나온다

- 집권 여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함
-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과 EU, 일본처럼 거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정부의 재정 투입이 가능해짐
-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가 보조금 지원 규정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 성안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돼 추석을 앞두고 발의됨
- 특별법의 핵심은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 시설 구축, 연구개발(R&D)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임

[\(서울경제 2024.9.10\)](#)

글로벌 기업

1. 도요타·닛산, 車 배터리 1조엔 시설투자

- 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동차가 1조엔(약 9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본 내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을 1.5배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축전지 공장 확장 등에 총 1조엔을 투자할 계획임. 이 중 경제산업성은 최대 3500억엔(약 3조290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임
- 닛케이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경제 안보와 에너지 절약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의 공급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전함

[\(파이낸셜뉴스 2024.9.6\)](#)

2. 중국 리튬 중앙기업 탄생... 리튬 국유화 속도

- 중국 정부가 전기차 핵심 전략 광물인 리튬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9일 중국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중국 최대 광물 중앙 국유기업인 우광그룹(민메탈)은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의 현지 지방 국유기업인 칭하이염호공업(이하 염호공업)을 인수해 ‘중국염호그룹’이라는 중앙 국유기업을 새로 설립하기로 함
- 중국 염호그룹의 탄생은 칭하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리튬 생산업체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줌

[\(아주경제 2024.9.10\)](#)

3. 토탈에너지스, 아다니와 인도 태양광 프로젝트에 6000억원 투자

- 프랑스의 거대 에너지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와 인도 최대 재생에너지 기업인 아다니 그린(Adani Green Energy Limited)이 합작회사를 설립함. 3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두 회사가 인도 구자라트주의 카브다에 위치한 태양광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함
- 합작회사는 최대 1575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구축하게 됨. 로이터는 이번 합작투자가 인도의 재생에너지 시장을 겨냥한 두 회사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도의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함

[\(임팩트온 2024.9.5\)](#)

4. 구글, 두 번째 반독점 소송 시작... 광고 기술 시장 지배력 논란

- 구글이 1년 만에 다시 한번 미국 법무부와 법정에서 맞붙음. 이번에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 혐의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재판은 구글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인 광고 기술 사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8일(현지시각)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구글이 광고 서버, 광고 거래소, 광고주 광고 네트워크 등 온라인 광고 자동화 생태계 내 3개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유지했는지 여부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9.8\)](#)

국내 기업

1. SK에너지,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용 생산라인 구축... 상업 생산 돌입

- SK에너지는 11일 국내 처음으로 코프로세싱(Co-Processing) 방식의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용 생산라인을 갖추고 다음달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힘
-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 바이오 원료를 투입해 SAF를 비롯한 저탄소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임
- 이번 SAF 상업 생산이 시작되면 SK에너지는 SAF 사업 확대를 위한 원료 수급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됨

[\(기계신문 2024.9.11\)](#)

2. 포스코인터, 인도네시아 해상 탄소 포집·저장 사업 진출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페르타미나와 해상 탄소 포집·저장(CCS) 사업을 추진함
- 페르타미나그룹 자회사 5곳과 공동 연구에 돌입함. 미국에 이어 인도네시아 시장에 뛰어들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CCS 사업을 확대하는 것임
- 9일 페르타미나와 안트라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국제 지속가능성 포럼(Indonesia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Forum)'에서 페르타미나그룹 자회사 5곳과 CCS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더구루 2024.9.9\)](#)

3. CJ제일제당, 美 라이고스와 협업... 바이오 파운드리사업 확대

- CJ제일제당이 미국에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생산 거점을 건설하고 북미 바이오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함
- 미국 친환경 소재기업 라이고스(Lygos)는 10일(현지시간)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문과 지속가능·고기능성 소재 상업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해당 계약을 토대로 미국 아이오와주에 바이오파이너리(Biorefinery·생물학적 연료정제) 생산 기지를 세운다는 방침임

[\(더구루 2024.9.11\)](#)

4. “배터리 불황도 우리는 못 막아” 에코프로-중국 GEM과 협업 맞손

- 에코프로가 배터리 시장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전구체 제조사인 GEM과 적극적인 협업에 나섬. 에코프로는 9일 GEM과 손잡고 양극소재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하고, GEM의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을 인수해 제련업에도 본격 진출하기로 했다고 밝힘
- 에코프로는 이 사업이 '제련-전구체-양극재' 등 양극 소재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매일신문 2024.9.9\)](#)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9.6(금) ~ 2024.9.12(목)

제공일시 2024 09 2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U, 녹색철강 할당제 법제화 움직임... 자동차업계, “수요 강제로는 해결 못해”

- 유럽 자동차업계가 ‘녹색철강’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 6일(현지시간) 유럽 현지 매체 유렉티브(Euractiv)는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가 일정량의 친환경 철강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유럽연합(EU) 법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철강업체, 환경단체, 독일 정치인 등이 제안했다
-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대변인은 “친환경 철강을 위한 과리 무역은 피해야 하며, 그 사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 철강 의무화 이슈는 지난 7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유럽 의회 재선 연설 이후 탄력을 받고 있음. 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집행위원회 출범 100일 이내에 발표할 ‘청정 산업 협약’의 일환으로 친환경 자재를 위한 ‘선도 시장(lead markets)’ 창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반면, 자동차업계는 수요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한 정치권의 분석이 틀렸다고 반박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대변인은 “친환경 철강으로의 전환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투자 비용 지원을 통해 촉진되어야 한다”며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할당제는 수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춘 법안이기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녹색철강이 부진한 주요 원인은 고비용 구조에 따른 공급 부족에 있다는 것임
- 실제로 현재 친환경 철강 생산시설 투자 비용은 주로 국가 보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EU 철강업체들의 탈탄소화 계획도 전체 철강 생산량의 절반만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
- 유럽노동조합연맹(IndustriAll)의 분석에 따르면, EU 배출권 거래제(ETS) 적용을 받는 고로(대형 용광로)는 연간 97.5메가톤을 생산할 수 있지만, 탈탄소화 전략은 54메가톤만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정임
- 특히,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는 석탄 기반의 철강 생산을 친환경 철강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아직 ‘이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유럽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주디스 커튼-달링은 밝혔다
- 비영리단체, 교통과 환경(Transport & Environment, T&E)의 자동차 정책 매니저인 알렉스 케인즈는 “자동차 산업은 철강을 포함한 청정 자재의 선도 시장으로서 매우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 유럽철강협회(Eurofer) 데이터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건설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철강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EU 전체 철강 수요의 18%에 달함
- 케인즈 매니저는 “자동차 산업은 보다 고품질의 평판(얇고 넓은 판형의 철강) 제품을 많이 사용하며, 이는 전통적으로 석탄 기반 철강 생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 특히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이 초기 단계에서 추가적인 친환경 비용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고 덧붙였다
- 독일 내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그룹의 독일 대표단은 7월 발표 입장문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정 비율의 친환경 철강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대표단은 “소규모 할당제는 국제 판매 시장을 창출하고 동시에 최종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T&E의 계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친환경 철강 40% 할당제를 달성하더라도 전기차 한 대의 가격은 57유로(약 8만4806원)만 추가될 것이며, 이는 신차 가격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 그러나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대변인은 “이러한 할당제에 따른 비용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다”며, “비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편,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친환경 철강 톤당 추가 생산 비용을 300유로(약 45만원)로 추산했다. 유럽철강협회 사무총장 악셀 에거트는 “자동차에 가죽 시트를 추가하는 데는 2000유로(약 298만원)가 들지만, 친환경 철강을 추가하는 데는 300유로(약 45만원)만 든다”며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이에 유렉티브는 추가 비용은 무엇이 ‘친환경 철강’으로 정의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대한 EU 차원의 정의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임팩트온 2024.9.10\)](#)